
「2022-제3호(Vol. 21호)」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2. 4. 30.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4월 최근 경제동향 •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운용 • ' 22.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 NABO 경제동향 제28호 •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국제경제리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 재정 (4~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 • NABO 재정동향 & 이슈 • 2022년 4월 재정동향 및 이슈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3. 예산·재정 관련법령 (6~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 「주류 먼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8~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공공배달앱 :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의 전환 • 초·중·고교 사교육비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과제 • 핀테크의 금융서비스 확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 정부의 ESG 인프라 확충 정책 방향 • MZ세대 현황과 특징 	강원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11~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 11.2조원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지급 • 2022년 5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 계획 배포 •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기본계획 발표 •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예비 선정 결과 발표 •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1조 9천억 원 투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1. 경제

출처

■ 2022년 4월 최근 경제동향

기획재정부

- (최근 국내경제)

수출·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내수회복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상승세가 확대됨.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국 주요 도시 봉쇄 조치,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회복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됨. 이에 선제적 물가관리 등 대내외 리스크 점검 및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최소화 역량을 집중하면서 변이바이러스 피해 대응과 경기회복 뒷받침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임.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 광공업 생산, 소비판매는 증가, 서비스업 생산 및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감소함.

(고용부분) 취업자 수가 증가세 지속하여 전년 동월 대비 83.1만명 증가, 실업률은 3.0%로 전년 동월대비 1.3%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함.

(금융시장 부분) 미국 고용지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주가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환율 및 국고채 금리가 상승함.

(물가) 농·수·축·수산물 오름폭은 축소, 석유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착상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음.

[☞바로가기](#)

■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

한국은행

- 최근 주요국의 가파른 물가 오름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물가가 2012년 이후 최고치 4.1%(22.3월기준)까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등 핵심부품의 생산 차질과 국제 물류비용 상승의 병목현상이 동시에 발생한데 기인함. 이에 더해 국제 원자재 및 상품가격 상승이 수입물가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빠르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최근의 경제 여건상 향후 물가전망은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과 러-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으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공급 병목현상도 장기화가 지속되고 여기에 더해 국내 소비도 방역조치 완화로 회복될 경우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 이와 같은 물가여건 및 전망 하에서 바람직한 정책방안 모색과 중기적 시계의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 물가상승 압력이 전방위로 빠르게 확산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주체들의 물가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중기적 시계에서의 거시경제 안정화 도모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함.

[☞바로가기](#)

1. 경제

출처

■ 2022년 4월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기획재정부

- (보고서 주요내용)

전쟁, 긴축적 통화·재정정책, 중국 성장둔화, 코로나 영향으로 22.1월 대비 성장률 0.8% 하락함. 유럽선진국은 에너지가격 폭등, 공급망 훼손 악화등에 따라 성장률이 큰폭으로 하락하고, 신흥국은 곡물가 상승과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대부분 성장률이 하락하나 일부 산유국은 유가상승으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됨.

- (세계경제에 대한 평가)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금년 세계 경제 회복세가 대폭 둔화될 것으로 보고, 금번은 전쟁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첫 전망으로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훼손, 인플레이션 등이 보다 심화 된 것으로 분석함. 전쟁으로 더욱 악화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선 긴축 통화정책이 요구되나 경기회복 필요에 따른 각국 여건별 섬세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전망함.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확대된 재정지원을 축소하되, 전쟁 및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함.

-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 우리경제 전망도 하향조정 되었으나 세계 및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되었음. 불가피하게도 전쟁의 영향은 있었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제한적임.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 와중에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코로나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거한 20~22년 평균성장률은 G7국과 비교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고, 2022년도는 미국에 이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가 2023년 미국도 추월할 것으로 평가. 한편 소비자 물가도 지난 전망 대비 상향조정 되었으나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의 영향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의 노력으로 일부 상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음.

[바로가기](#)

■ NABO 경제동향 (제28호)

국회예산정책처

-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음.

- 3월 수출은 17개월 연속 증가하며 634.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중간재 수입확대 등으로 수입 역시 증가하여 636.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월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함.

-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고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 2월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도 전년 동월대비 증가함.

- 3월 고용은 양호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어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83.1만명 증가함.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폭 확대 등으로 국고채금리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 역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 3월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폭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4.1% 상승하였고, 3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전월세 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바로가기](#)

■ (국제경제리뷰)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 (검토배경)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과 함께 인구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그동안 고성장을 견인한 노동력의 이점이 축소됨에 따라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고, 중국 당국의 대응방안을 평가해 보고자 함.
- (중국 인구구조 변화 양상) 중국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며 “고령화사회(2000년)”를 넘어 “고령사회(2021년)”로 진입함. 중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3년 10.1억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지금의 저출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유소년층과 생산연령층 비율은 감소하고 고령층 비율이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구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 UN에서도 중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2035년(20.7%)에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인구구조 변화의 경제적 영향)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p 증가할 때 중국의 GDP 성장률은 약 0.1~0.5%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UN이 추정한 중국의 미래 인구변화 모형을 적용하여 예측해 보면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GDP 성장률은 2021년 대비 2025년 0.1~0.5%p, 2030년 0.3~1.2%p, 2035년 0.6~3.0%p까지 하락할 수 있음.
 - ①물가 : 인구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마다 결론이 상이하며, 본 연구에서는 고령인구 비중과 물가상승률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②정부재정 : 고령인구 비중이 1%p 증가할 때, GDP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약 0.1%p 증가하고, 재정수입은 약 1.8%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
 - ① 생산성 제고 :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중국 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기술이 노동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
 - ② 고령층 인구의 노동력 활용 : 정년 연장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층의 유효 노동력 활용을 통한 노동공급 증가에 기여할 전망
 - ③ 여성의 노동참여와 출산율 제고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 관련 정책이 개선·보완될 경우 여성의 노동참여와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
 - ④외국인 노동력 활용 :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통한 노동력 확보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외국인 체류에 우호적 환경조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결어) 인구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야기되는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중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써, 향후 신성장산업에서의 경쟁 격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가 압력 등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 될 가능성을 시사함.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

국회예산정책처

- (2022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사업 재정소요 추계) 2022년에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재정사업은 저출산 및 신 양극화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출 확대에 주안점을 둬, 사회인구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복지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복지분야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 복지분야 지출 추이를 고려한 보다 면밀한 재정운용이 필요함.
- (2022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세법개정안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세제지원, 납세자 편의제고 등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정비 등으로 구성되었고, 향후 글로벌 금융·통화정책의 긴축전환 등 대내외 충격이 자산가격 조정 등으로 연계될 경우 중장기적인 세입증가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이후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 동향) 코로나19 시기 OECD 국가의 조세정책은 납부유예 등 조세지원, 투자공제 등 경기부양,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확대 유형으로 구분됨. OECD는 코로나19 이후 성장률 둔화, 불평등 심화, 디지털화, 고령화, 기후변화 등 환경을 감안할 때, 조세정책 방향으로 포용적 성장, 공정,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목표를 제시함.
-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세제 및 재정지원 동향)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각국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에 대한 세제혜택 및 재정적 지원, 전기충전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주요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전기자동차 의무 판매 대수 할당 등의 규제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유류세 수입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 영국) 1908년에 공적연금을 도입한 영국은 사적연금 활성화, 공적연금 통합 등 연금개혁을 실시함. 연금크레딧과 신국가연금이 공적연금에 해당하며, 영국 정부는 공적 연금의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실행하였음. 이것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각각의 역할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여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적정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함.

[바로가기](#)

■ NABO 재정동향 & 이슈

국회예산정책처

- (주요 재정지표) 22년 1-2월까지의 총수입과 총지출 진도율은 각각 19.2%, 19.4%임. 2022년 2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15.1조원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2.4조원 확대되고, 2021년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939.1조원)는 2020회계연도 결산대비 119.9조원 증가함.
- 주요 이슈로는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2022년도 우주개발 진흥 시행계획 발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 발표’,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확정’, ‘2022년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공공기관의 녹색금융 조달 및 투자 현황’,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기준 발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향후 과제 및 시사점 등을 제시함.
- 해외재정동향으로는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 ‘EU 집행위원회, 「녹색분류체계 보완 기 후위임법률안」 발표’ 를 선정하여 재정관련 사항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바로가기](#)

■ 2022년 4월 재정동향 및 이슈

기획재정부

- (재정 운용 동향)

- ① 총수입 : 고용회복·소비증가 등으로 국세·세외수입 중심으로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1%p 증가한 19.2%으로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함.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하여 총 세입예산 343.4조원 대비 진도율은 20.4%를 기록함.
- ② 총지출 : 코로나 피해지원, 경기회복 뒷받침 등을 위한 적극 재정 신속집행 독려로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1%p 증가한 19.4% 수준을 기록.
- ③ 재정수지 : 고용회복과 소비증가로 총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추경사업 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더 큰폭으로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확대되어 2월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5.1조원(누계)으로 전년 동기대비 적자폭이 2.4조원 증가됨.
- ④ 국가채무 :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5조원(경쟁입찰 기준 14.7조원)

- (주요 재정 이슈)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대응을 위한 고령층 대상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필요성에 대해, 고령자의 노하우·숙련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재훈련·향상훈련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등 고용서비스·직업훈련의 개편방안 제시 ②자산의 대부분이 주택(80%)형태이고 노후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유용성을 적극 홍보하고 담보주택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현행 경매제도 외에도 신탁을 통한 공매 등 다양한 정산방법 도입의 필요성 설명 ③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에 청년인구가 집중되고 있으나 과다 경쟁과 미래불안 등에 따라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수도권의 저출산 심화가 우리나라 전체의 저출산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함. 우리나라 주요 인구문제인 초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에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육성,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

[재정건전성을 위한 주요국의 재정제도]

- ①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의 목적으로 도입된 재정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소개함. 재정위원회는 장기재정전망, 재정준칙 준수 여부 등 재정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로 각 국가별로 상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현실정에 맞는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함.
- ② 지출검토제도의 개념 및 네덜란드, 영국의 지출검토제도 특징, 최근 동향을 소개하면서, 제도가 재정정상화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 외에도 의무지출 등 모든 지출을 검토 대상으로 포함하고, 재정당국 주도하에 각 부처가 참여하여 함께 방안을 논의하는 범정부적 거버넌스와 내각의 지지가 중요함을 강조.

[디지털 트윈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디지털 트윈은 고비용·고위험 실험과 분석을 가상환경에서 수행함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아 각광받고 있는 기술 분야로, 정부는 디지털 트윈 육성을 위해 가상환경 구현에 필요한 다양한 사물의 3D 정보를 공공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등의 성장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분야별 선도 실증사업으로 대규모 확산,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임을 밝힘.

[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 '22.3.22. 시행 '22.3.22.)

법제처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예산의 재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공포, 2022. 3. 22. 시행)됨에 따라, 예산의 재배정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기별 세출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통해 그 업무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개정 '22.3.18. 시행 '22.3.18.)

법제처

-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승인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계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와 자동계수기 사용점검 기록부 서식을 정하는 한편, 주류제조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세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증지를 붙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개정 '22.3.18. 시행 '22.3.18.)

법제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공익단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 의무와 관련한 지정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 '22.3.18. 시행 '22.3.18.)

법제처

-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하더라도 과세표준 합산 제외대상으로 보도록 하고,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상속인이 제출하는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개정 '22.3.18. 시행 '22.3.18.)

법제처

-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제 지원의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인 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개정 '22.3.18. 시행 '22.3.18.)

법제처

-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탄력세율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처분 사실을 신고하려는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강원도 공공배달앱 :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의 전환

강원연구원

- **(논의 배경)** 1인 가구 증가, 간편결제 발달, 코로나19의 비대면 소비 증가로 배달앱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배달앱은 상위 3사가 98%를 점유하는 독과점시장 구조임. 이에 배달앱 독과점 시장구조와 높은수수료 및 광고료 부담,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우려로 그 대안 중 하나인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음. 강원도 또한 2020년 12월 ‘일단시커’ 공공배달앱을 출시하였으나, 소비자층과 가맹점 확대 미비로 배달앱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임.
- **(당면과제)** ①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여 자체 동력이 부족한 지속가능성 문제 및 민간과 경쟁이 안되는 공공앱의 저조한 성과 ②특정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네트워크 효과 부족 문제(충분하지 않은 입점업체) ③상품권 조기 소진 시 앱사용 혜택 감소 부분 및 지역사랑상품권에 의존하는 소비자 유인의 전략 문제
- **(개선방안)** 배달앱 시장 경쟁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①수요·공급 측면에서 소비자와 가맹점 유인 전략의 다변화. ②운영 측면에서 플랫폼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기존 서비스 가격과 이익배분 구조를 개선하여 배달앱 참여주체의 이윤 확대. ③ 강원도가 플랫폼 협동조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시장진입을 지원.

[바로가기](#)

■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들어가며)**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나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고치로 나타남.
- **(변화추이 및 시사점)** 학교급별 사교육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특히나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폭(38.3%)이 중학교(17.7%), 고등학교(3.0%)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과 함께 초등학교 사교육비와 관련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쟁점)** ①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②사교육비 증가 추세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 ③사교육 의존도 심화 ④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 변화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반영 미흡 등의 문제 제기.
-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①차기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별도의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 ②초등학교 사교육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의 참여율 및 질 제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방과후학교의 체계적, 안정적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③ EBS 수능 연계 비율 복원 등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크다고 인식되는 교육정책 적용 필요 ④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에 ‘사교육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핀테크 금융서비스 확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 (서론) IT기술의 발전, 코로나 확산의 비대면 방식 확대 등 금융서비스 시장에서 핀테크 업체와 기존 금융기관 간에 상호 경쟁과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금융시장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핀테크 회사의 금융시장 진출 확대에 인한 영향 등을 분석, 시사점을 찾고자 함.

(핀테크의 금융서비스 확대 요인) ①인터넷 통신기술과 스마트폰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금융플랫폼과 앱이 활발하게 개발·보급되고 있음 ②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핀테크 및 빅테크 회사들의 금융업 진출이 늘어남 ③금융정보 공유 관련 법률 제·개정과 함께 오픈뱅킹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④금융서비스의 편리성 증대, 거래비용 절감 등 편의의 증가로 모바일뱅킹 및 핀테크 서비스 활용 빠르게 증가 ⑤코로나19 영향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금융기관의 비대면 방식의 금융시장 구조 변화도 한 요인으로 분석됨.

(핀테크 기반 서비스 확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① 부정적 영향 : 기존 금융업계와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감소하고 신용리스크 증대로 금융안전성 저하

② 긍정적 영향 : 금융시장의 분권화, 다양화, 효율성·편리성 제고, 투명도 상승의 효과

(결론 및 시사점) 기술기반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핀테크 확산은 기존 금융시스템에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라는 부정적 영향과 핀테크 기술의 특성상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효율성을 높여 금융안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미칠 수 있음. 이론적으로 핀테크 확산의 부정적·긍정적인 영향이 상존할 때 실제 어떤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인가는 실증적인 문제임. 보험사 및 카드사의 수익성 분석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의 영향이 없고, 반면 카드사의 안전성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은 향후에도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바로가기](#)

■ 정부의 ESG 인프라 확충 정책 방향

- (개요) ESG는 투자결정 및 기업경영에서 재무수익 외에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면서, 장기수익성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코로나19로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고 양극화가 우려됨에 따라 ESG 논의가 가속화되었는데, 경제모델이 효율성,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등에 기반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ESG가 글로벌하게 확산된 과정과 국내동향, 향후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 **글로벌 ESG 동향** ▶ 글로벌 금융회사 등이 ESG 이슈를 투자에 반영해야한다는 UN의 사회책임투자원칙 발표 이후 활발히 논의되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ESG 투자선언을 계기로 본격화 되었음. 이후 사회적 담론을 넘어 기업과 투자자의 자발적 행동변화를 촉발하는 메가트렌드로 부상함.
- **국내 동향** ▶ 연기금 및 주요 금융기관이 ESG투자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도 ESG경영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으나, 공시기준 미흡과 ESG 관련 각종 정보공개제도가 부처별 각각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 **정부 정책 방향** ▶ 국내 ESG생태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고, 공공부문도 ESG경영을 선도해 나가는 동시에, 자율공시 항목을 확대 하는 등의 ESG 요소 적용과 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바로가기](#)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 MZ세대 현황과 특징

한국은행

- (개요)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성장하여 기존 세대와 다른 생활방식을 보이는 MZ세대가 경제활동의 주력 연령대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의 삶의 방식과 소비행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MZ세대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MZ세대의 특징)
 - ① 일과 가정의 균형 추구 ② 디지털 원주민 ③ 공유경제 선호 ④ 주식 직접투자 선호
 - ⑤ 여타세대 대비 근로소득 증가세 부진 ⑥ 금융자산 정체 ⑦ 주택마련을 위한 부채 증가
 - ⑧ 최근 금융자산 불평등 악화 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소비 정체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시사점) 기존 세대와 상이한 선호체계를 보이는 MZ세대가 국제 금융위기 이후 노동 및 소비 등에서 주력 세대로 부상함에 따라 그들의 경제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특징 분석 결과, MZ세대의 취약한 경제상황은 향후 경제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당국에서는 MZ세대의 생활방식, 취향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점검하면서 소득증가, 부채감소 등 동세대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 정부는 4.5(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향후 국가결산보고서 등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2021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

- ① (총세입) 전년 결산대비 58.7조원 증가(12.6%)한 524.2조원
- ② (총세출) 전년 결산대비 43.1조원 증가(9.5%)한 496.9조원
- ③ (세계잉여금) 결산상 잉여금(총세입 - 총세출-차기 이월액)은 23.3조원 발생
 ※ 총세입 (524.2조원) - 총세출 (496.9조원) - 다음연도 이월액 (4.0조원)
- ④ (재정수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국세수입 및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개선됨.

[바로가기](#)

■ 11.2조원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지급

기획재정부

정부는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18.0조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의 배분 계획에 따라 지자체(광역시·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였다고 밝힘.

※ 지방교부세 5.9조원 (특별교부세 1,515억 원은 추후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조원 지방교부세(금)의 정산은 전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작년 세수 개선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으로 지방교부세(금)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여 자체수행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노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함.

[바로가기](#)

■ 2022년 5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 계획 배포

기획재정부

- 주요 내용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2년 5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배포함.

- ① **디지털 뉴딜** : 데이터 댐을 통해 축적한 양질의 데이터를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2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1,241억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
- ② **그린 뉴딜** : 산업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유망 녹색기업 육성 자금 지원을 지속할 계획.
- ③ **휴먼 뉴딜**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2022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통합공모’ 실시 계획.
- ④ **지역균형 뉴딜** : 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시·도 또는 시·군·구 경계를 넘어 추진하는 디지털·그린 뉴딜사업) 공모심사 통과한 사업 대상 컨설팅 추진, 2차 심사 대상사업 선정할 계획.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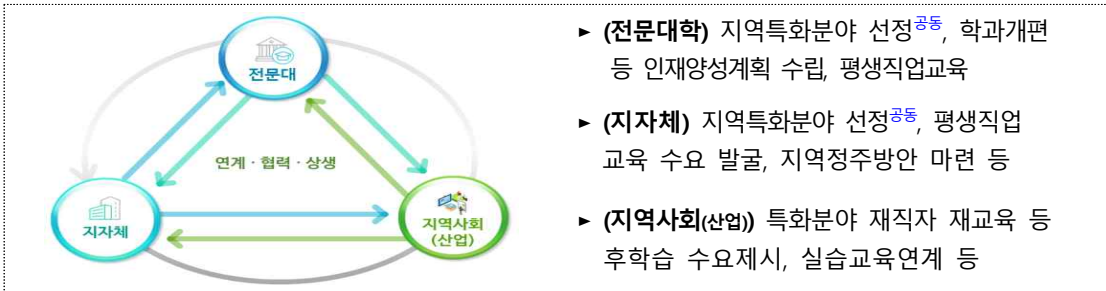
출처

■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함. 올해 선정된 30개 연합체(권소시업, 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에는 연합체당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임.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 >



※ 특화분야 :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 또는 지역 발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

[바로가기](#)

■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예비 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신규로 강원 플랫폼(단일형)과 대구·경북 플랫폼(복수형)을 4월 18일(월)에 예비 선정하여 발표함. 이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교육부는 2020년 3개 지역혁신 플랫폼 선정을 시작으로 플랫폼 구축 지역을 확산해왔고, 2022년 지역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2개 플랫폼을 신규 선정(강원, 대구-경북)하였음. 이 두개 지역은 향후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혁신기관 간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

[바로가기](#)

■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1조 9천억 원 투입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해당 사업의 지원을 위해 115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9,963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이는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미군기지 주변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으나,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자체,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로가기](#)